야간에도 주간과 같은 쾌적한 라운딩
경주컨트리클럽
예약전화 054.778.8989
경북 경주시 보문로 182-98 (북군동 375-1번지)

경북일보

백년주조
옛 것을 고집해서 빚어낸
기다림과 풍미가 깃든 전통주
백년주조 고객센터 054.434.6625

대표전화 (054)289-2222·(053)745-1122 kyongbuk.com 제8847호 2024년 3월 26일 화요일

# "글로벌 이주사회 대전환 서둘러야"

移住

## 경북연구원 류형철 박사, 지방소멸 위기 극복 해법 제안
## 지역 권한 대폭 확대한 중앙-지방 협력체계 강화 지적도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글로벌 이주사회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주사회로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지역에 권한을 대폭 확대한 중앙-지방 협력체계 강화도 제기됐다.

광역비자 도입, 외국인 근로자 지원 정책, 결혼이주여성 관련 정책 등 지역에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북연구원 류형철 박사는 25일 'CEO Briefing' 제707호를 통해 '경북이 대한민국 이주사회 대전환을 이끈다'라는 주제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류 박사는 정부가 우수인재 복수국적제도, 숙련기능인력 비자 확대, 유학생 유치 확대, 외국인 근로자 도입 확대 등 다양한 정책으로 인구구조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있지만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포용성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이주사회 대전환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가칭)대한민국 이주사회 대전환 촉진 특별법'을 제정해 정책 목표와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및 프로그램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영주권 신청 조건의 유연화를 위해 신청 조건을 세계적 개방국가의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주민에 대한 포용성 확대도 지적했다. 이민자 통합 및 지역사회 정주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내국인 근로자 고용의 어려움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공급 정책을 점진적으로 완화하거나 폐지해 이주민을 단순한 노동시장 보완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인식시켜야 한다고 했다.

또 협력적 거버넌스와 네트워크의 구축을 위해 다문화 가족,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이민자 통합 지원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2면에 계속

김창원 기자 kcw@kyongbuk.com

교수도 학생도 없는 의대 강의실 전국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시작된 25일 대구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

# 전의교협 "2천명 증원 철회부터… '0명' 요구는 아니다"

## 전국 대부분 의대서 집단 사직
## 외래진료 축소 예정대로 진행
## 정부와 대화 가능성은 남겨둬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25일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및 배정'을 먼저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3·19면

전의교협은 이날 오전 연세의료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이러한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전공의에 대한 처벌은 의대 교수의 사직을 촉발할 것이며,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공의와 학생, 의료진에 대한 고위 공직자의 겁박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며 "입학 정원과 배정은 협의나 논의의 대상도 아니며, (한 위원장과) 대화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전의교협은 정부의 의대 증원이 의학교육의 질을 저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의대 입학정원 증원은 의대 교육의 파탄을 넘어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게 자명하다"며 "현 인원보다 4배 증가하는 충북의대와 부산의대 등에서는 교육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정부에 의한 입학 정원과 정원 배정의 철회가 없는 한 이번 위기는 해결될 수 없다"며 "정부의 철회 의사가 있다면 국민들 앞에서 모든 현안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이날부터 예정돼 있던 교수들의 사직과 진료 시간 축소는 변함없다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입학 정원의 일방적 결정과 정원 배분으로 촉발된 교수들의 자발적 사직, 누적된 피로에 의해 어쩔 수 없는 주 52시간 근무, 중환자 및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외래진료 축소는 금일부터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2면에 계속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 TK신공항 사업 '민간참여자' 공모
# 대구시, 내달 5일까지 의향서 접수

## 홍준표 "6월까지 SPC 마무리"

대구도시개발공사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하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사업을 대행하고 종전부지·주변지 개발사업시행에 참여할 민간참여자를 공개 모집한다.

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주변지 개발을 맡을 사업 대행자인 특수목적법인(SPC)이 구성되는데, LH와 대구도시개발공사와 같은 공공시행자가 50.1%, 민간참여자가 49.9%의 지분을 갖게 된다. 총사업비는 약 20조9000억 원인데, 예상 수익률은 내부수익률(IRR) 기준 6.55%다.

대구도시개발공사는 4월 5일 오후 5시까지 사업참여의향서를 접수하며, 6월 24일 오후 5시까지 민간참여자 지정신청서 및 사업참여계획서를 받은 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건설투자자(CI)가 포함된 2개사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구성하는 게 기본이다. 여기에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28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자(재무적투자자(FI))가 포함돼야 하고, 사업참여의향서를 제출한 법인 1개사 이상이 포함돼야 한다. 건설투자자(CI)가 타 시·도 업체인 경우에는 대구시 또는 경북도 내 소재의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한다.

대구경북신공항 사업은 대구 군위군 소보면과 경북 의성군 비안면 일대 1634만127㎡ 부지에 대구 동구에 있는 군 공항과 민간공항을 옮기는 사업이다. 종전부지·주변지 개발사업을 통해서는 도시개발사업과 산업단지 개발사업 등을 진행하게 된다.

홍준표 시장은 25일 간부회의에서 "6월까지 SPC 구성을 마무리하고, 군 공항 사업계획도 연내 국방부 승인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 저출생 극복 재정 신속·과감 투입

## 李 지사 주재 대책 회의 정례화
## 신규사업 발굴·제도 개선 박차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5일 저출생 대책 사업에 재정을 과감히 투입할 것을 지시했다. 관련기사 4면

이 지사는 이날 처음으로 가진 '저출생과 전쟁 대책·점검 회의'에서 저출생 극복 분야에 대한 과감한 예산 투입, 기존 규제·제도를 뛰어넘는 저출생 사업을 위한 신도시 특구 지정,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 운영 등을 주문했다.

이 지사는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정책은 예전 그대로다. 저출생 관련 제도를 현실에 맞게 다 고쳐야 한다. 기존 규제·제도를 뛰어넘어 현장에서 저출생 사업을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도청 신도시를 특구로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저출생 극복 분야에 과감하게 재정을 선제 투입하고 출산, 돌봄, 결혼 등 각 분야에서 도민들의 불편 사항을 접수해 정책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한 이 지사는 이날부터 매주 월요일 저출생과 전쟁 대책·점검 회의를 직접 주재한다. 기존 간부회의와는 별도로 운영되며 저출생 대책과 점검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된다.

이 회의는 저출생과 전쟁의 종합상황점검회의체로 핵심 방향은 기존대책 추진 점검 및 빠른 현장 집행, 신규사업 발굴 및 제도개선 사항 정비, 기존 규제·제도에 구애받지 않는 특구 시행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제1회 추경 예산 중 저출생 대책 분야 예산 편성 현황 및 확대 방안, 소상공인 지원방안 등 실·국별 실행 과제 점검, 공동체·아이를 핵심으로 한 제5대 정신운동 추진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m

與, 강대강 의-정 갈등 중재 나서 4면 | 국민의힘 경북도당 선대위 발족 5면